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79호
2024. 11. 1.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0)

■ 연구원 소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0)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

- ◎ 지난 약 1개월(9.21.~10.27.)간 입법부에서는 총 739건의 법안이 발의됨. 이 중 건설산업 관련 주요 법률의 경우 35개의 법률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된 산업 규제 강화 입법 외에도 건설사업 추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위축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입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짐.

이슈 1: 반복된 예타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입법... 공전 Stop, 조속 입법 필요

- ◎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조사 대상 기준 상향 또는 특정 대상 사업 면제)에 대한 입법이 반복적으로 발의 중임.
-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경우 그간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무리한 사업추진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함.
 - 하지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어 동 기간 증가한 경제 및 재정 규모의 대폭 증가를 반영치 못해 국가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그간 오랫동안 제기됨.
- ◎ 이에 22대 국회만 하더라도 올해 10월까지 단 5개월간 총 8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짐.
-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9월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3건(의안번호 제8호, 제829호, 제2314호), 타법 제·개정안 2건(의안번호 제906호, 제2617호) 등이 법안 발의됨.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및 △특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동남권순환광역철도), △특성 지역 사업에 대한 면제(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광역철도 확충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축소를 담고 있음.
 - 이번 달에도 총 3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법안이 추가 발의됨.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236호)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을,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529호)의 경우 각각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 상향을 제시함.
 - 김태호 의원의 경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해당 사업과 더불어 역사 3km 이내 주변 개발 지역에 대해 기획재정부 결정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한 특별법을 제안함(의안번호 제4398호).

- ◎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 입법안에 대한 시각은 양분된 상황으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전만이 반복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예타 제도는 이미 법령을 통해 여러 면제 조건^①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지역균형발전사업, ^③국가정책사업, ^④예타 실익이 낮은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재정당국의 경우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경우 장기간 고착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필요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대표적으로 서울시)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문턱 완화 필요(대부분의 지자체)를 사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 중임.
 - 더욱이 지난 6월 대형 국가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발표 이후 건설 분야에서도 제도 개정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어진 상황임.
- ◎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축소와 관련된 입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 동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 관련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입법부와 재정 당국 간 빠듯한 재정 여건과 계속된 경제 발전과 지역 균형, 국민 삶의 질 향상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길 희망함.

이슈 2: 계속되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입법 대안

- ◎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에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리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단기 물량 또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 ◎ 이러한 산업 위축 극복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마련 제시됨.
 -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제안함(의안번호 제4207호).
 - 김준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 개발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가하던 것을 2028년까지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제안함(의안번호 제4371호).
 - 이 외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목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입법안을 제안함(의안번호 제4571호).
- ◎ 이번 달 입법된 입법 대안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간접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사항임. 하나, 비주거, 토목, 산업설비 등의 타 건설 분야 또한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추가 입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4.9.21.~'24.10.27)

※ **규제 강화** 표기의 경우 건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입법안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기계 관리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201호(윤종오 의원 등 17인)] ('24.9.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 규정이 많아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못한 문제 반복 - (제안이유②)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 이득을 취하는 불법임대가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 - (제안방향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 삭제,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제1호의3) - (제안방향②) 대여 가능한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안 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건설산업 기본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202호(윤종오 의원 등 19인)] ('24.9.23.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공사에 한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민간 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저하 개선 필요 - (제안방향①)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 - (제안방향②)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목적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10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207호(김정재 의원 등 10인)] ('24.9.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23년의 경우 건축 허가면적 25.6% 감소, 건축 착공면적 31.7% 감소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의 경우 지역경제와 서민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체감경기 개선 목적 개발부담금 감면 필요 - (제안방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중 올해('24.1.1.~'24.12.31.)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감면(안 제7조의3 신설)
「시설물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211호(손명수 의원 등 18인)] ('24.9.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부, 주무 부처, 지자체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의 경우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 시기에 대해 미규정 - 최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재난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 (제안방향)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59조제1항)

법률명	주요 내용
「친환경 자동차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224호(이훈기 의원 등 12인)] ('24.9.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임. 구조적으로 소방자동차나 소방인력이 화재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려워 이러한 충전시설의 안전 개선 필요 - (제안방향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생산·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제안방향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 - (제안방향③) 관련 안전시설 설치 시 국가·지자체 지원 가능 (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236호(이원택 의원 등 10인)] ('24.9.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 및 재정 규모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액(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변동이 없어 상향 조정 필요 - (제안이유②)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신규 사업 유치가 불합리하기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차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액을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 상향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 촉진 유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주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345호(허영 의원 등 15인)] ('24.9.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등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건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모듈러 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활성화 필요 - (제안방향①)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 - (제안방향②)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제안방향③)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안 제51조 등)
「친환경 자동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350호(한정에 의원 등 12인)] ('24.9.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마련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대응 필요 - (제안방향)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 설치 또는 신규 지상 설치 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 지원(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371호(김준혁 의원 등 10인)] ('24.9.2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 발생 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최근 교육부는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민간경제 촉진 목적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폐지할 수 없으나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 인정 - (제안방향)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나,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의3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372호(허중식 의원 등 11인)] ('24.9.26.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지적 - 이에 따라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 산업통상자원부의 2030년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선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 -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을 통해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 기여 필요 - (제안방향①)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담당해야 할 책무 규정(안 제3조) - (제안방향②)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해상풍력발전지원단을 설치(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제안방향③)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확정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발전기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제안방향④)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 (제안방향⑤) 산업통상자원부가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 및 공동구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건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 (제안방향⑥)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 (제안방향⑦)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 (제안방향⑧)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29조)
「해상풍력 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378호(김원이 의원 등 26인)] ('24.9.26.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그간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제약이나 환경문제 및 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에서의 여러 이점과 조선·철강·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선 필요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①)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제안방향②)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제안방향③) 산업통상자원부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수립하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게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 및 어업인이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바람연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제안방향④)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해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송전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 (제안방향⑤)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 (제안방향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둬고 더불어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 (제안방향⑦)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접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풍력발전사업자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선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28조 및 제29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398호(김태호 의원 등 12인)] ('24.9.27.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 - (제안이유②) 수도권 집종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광역철도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은 과도 - (제안방향①) 이 법이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5조) - (제안방향②) 기획재정부에게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 (제안방향③)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사업시행자·실시계획,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제안방향④) 광역지자체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km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⑤) 국가는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100분의 70 이상을, 운영 비용은 전액 부담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 - (제안방향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 (제안방향⑦)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산·양산·울산광역시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소재한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하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427호(문진석 의원 등 11인)] ('24.9.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환경부는 2022년부터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홍수안전 확보사업, 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고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이유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다시 추진할 필요 - (제안방향) 광역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홍수 대응 및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437호(문진석 의원 등 10인)] ('24.9.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 중 - 또한,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중 - 허나,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제안방향①)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개정(안 제70조제1항) - (제안방향②)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 (제안방향③)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초과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발주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안 제72조제7항)

법률명	주요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451호(송재봉 의원 등 13인)] ('24.9.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 하나, 각 지자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안 제27조의3 신설)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452호(김상훈 의원 등 11인)] ('24.9.3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하도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아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하도급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을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의12 신설)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470호(서왕진 의원 등 13인)] ('24.9.30. 법률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그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질서 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①) 국가로 하여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제안방향②)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 설치(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제안방향③)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경우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제안방향④)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해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법률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⑤)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 (제안방향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 (제안방향⑦)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접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28조)
「국가 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529호(구자근 의원 등 11인)] ('24.10.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 남발로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제38조제1항)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548호(엄태영 의원 등 10인)] ('24.10.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건설 현장의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①) 건설 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 부여(안 제26조제7항 및 제38조제5항) - (제안방향②)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 (제안방향③)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8조의4제3항) - (제안방향④)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7조의3제1항)
「임금채권 보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551호(조지연 의원 등 14인)] ('24.10.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른 민사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은 '23년 말 기준 30.9%에 불과하여 변제금 회수 실적 저조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지속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 변제금 회수 시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유도(안 제8조의2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553호(김소희 의원 등 20인)] ('24.10.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어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규정(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지방세 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571호(김교흥 의원 등 10인)] ('24.10.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확대 필요 - (제안방향)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되거나,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해 현행 재개발사업과 동일 수준 취득세 감면(안 제74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574호(김정재 의원 등 10인)] ('24.10.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약 60%, 공공임대 약 8%, 민간임대 약 32%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임대차 시장이 선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 전세 위주 시장으로 고착된 상황 - 이에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실현 및 선진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전세시장 외 미국, 일본 등에서 보편화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리츠 등 법인이 동일 주택단지별 100호 이상 대규모로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도입 필요 - (제안방향) 최소 20년 이상 임대무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등)
「산업안전 보건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581호(박정 의원 등 10인)] ('24.10.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620호(이성윤 의원 등 10인)] ('24.10.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에만 국고를 보조하고 있으나, 일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94조원으로 광주와 대전 1.8조원, 울산, 대전 1.03조원보다 과다하여 도시 간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접하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동법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에 소외

법률명	주요 내용
	<p>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기에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방향①)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법 목적 규정에 포함(안 제1조) - (제안방향②)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제1호 등) - (제안방향③)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함께 고려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5항)
<p>「근로기준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623호(김위상 의원 등 11인)] ('24.10.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 전반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규제 신설(안 제44조의4 신설 등)
<p>「하도급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628호(민병덕 의원 등 11인)] ('24.10.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상의 부당 특약의 경우 민사상 효력이 유지되어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하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원도급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무효로 규정(안 제1조 및 제3조의4제3항 신설)
<p>「하도급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649호(민병덕 의원 등 11인)] ('24.10.10.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개정 필요 - (제안방향) 공공공사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p>「친환경자동차법」</p> <p>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725호(강득구 의원 등 10인)] ('24.10.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 사고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 중이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 - (제안방향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기초지자체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 - (제안방향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상생 협력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734호(이재관 의원 등 12인)] ('24.10.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동 대상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기에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주요 에너지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주요 에너지 포함) (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737호(최은석 의원 등 14인)] ('24.10.16.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 용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4574호)의 의결 전제 입법 - (제안방향) 임대사업자로서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안 제97조의9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742호(박성훈 의원 등 12인)] ('24.10.17.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결여되고 부대사업 활성화 난해 - (제안이유②)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 방식과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 - (제안이유③)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투자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구를 설정·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 개정 필요 - (제안방향①)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제안방향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방식 및 범위 확대(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 (제안방향③)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1조의6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769호(이인선 의원 등 10인)] ('24.10.18.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 심화 상황으로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 또한 매우 위축된 상황임과 더불어 임대주택공급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4574호)의 의결 전제 입법 - (제안방향)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98조의9 신설)

법률명	주요 내용
「임금채권 보장법」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809호(김위상 의원 등 10인)] ('24.10.21.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도급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자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 (제안이유②)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민사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개선 필요 - (제안이유③)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부여 필요 - (제안방향①)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 (제안방향②)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 (제안방향③)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 의무를 지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조세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04884호(윤준병 의원 등 10인)] ('24.10.24. 일부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법」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을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과 동시에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 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8조의3)

연구원 소식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세미나	2025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11월 6일 (수)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스마트 건설, 주택·도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연구와 시리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세미나는 2024년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2025년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을 통해 시장과 정책, 그리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국내 건설경제·산업 환경은 저성장, 경기 선행지표 위축, SOC 예산 축소 국면에 놓여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과 수요의 양극화, 예측 불가능한 위험 부담 등으로 인해 시장과 제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반에서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로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연구원에서는 현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를 조성하고자 함.																													
		<div>세미나 개요</div> <div>2024년 11월 6일(수), 14:00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div> <div>프로그래م</div> <table><tr><th>시간</th><th>내용</th><th>비고</th></tr><tr><td>13:40~14:00(20')</td><td>접수 및 등록</td><td></td></tr><tr><td>14:00~14:10(10')</td><td>개회사</td><td>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td></tr><tr><td></td><td>주제발표</td><td></td></tr><tr><td rowspan="2">14:10~15:00(50')</td><td>[제1주제] 2025년 건설경기 전망</td><td>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td></tr><tr><td>[제2주제] 2025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td><td>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td></tr><tr><td>15:00~15:15(15')</td><td>Break</td><td></td></tr><tr><td></td><td>종합토론</td><td></td></tr><tr><td rowspan="2">15:15~16:35 (80')</td><td>○좌장 : 이현석 교수(건국대학교)</td><td></td></tr><tr><td>○토론자 (기나다순)<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형일 우미건설 상무-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td><td>*상기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td></tr><tr><td></td><td>실의응답</td><td></td></tr></table> <div>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div>	시간	내용	비고	13:40~14:00(20')	접수 및 등록		14:00~14:10(10')	개회사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14:10~15:00(50')	[제1주제] 2025년 건설경기 전망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2025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15:15(15')	Break			종합토론		15:15~16:35 (80')	○좌장 : 이현석 교수(건국대학교)		○토론자 (기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형일 우미건설 상무-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상기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용	비고																													
13:40~14:00(20')	접수 및 등록																														
14:00~14:10(10')	개회사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14:10~15:00(50')	[제1주제] 2025년 건설경기 전망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2025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15:15(15')	Break																														
	종합토론																														
15:15~16:35 (80')	○좌장 : 이현석 교수(건국대학교)																														
	○토론자 (기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형일 우미건설 상무-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상기 토론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의응답																														